

무리한 기업 옥죄기의 결말

# ‘계열사 부당지원’ 공정위 제재, 5건 중 4건 ‘무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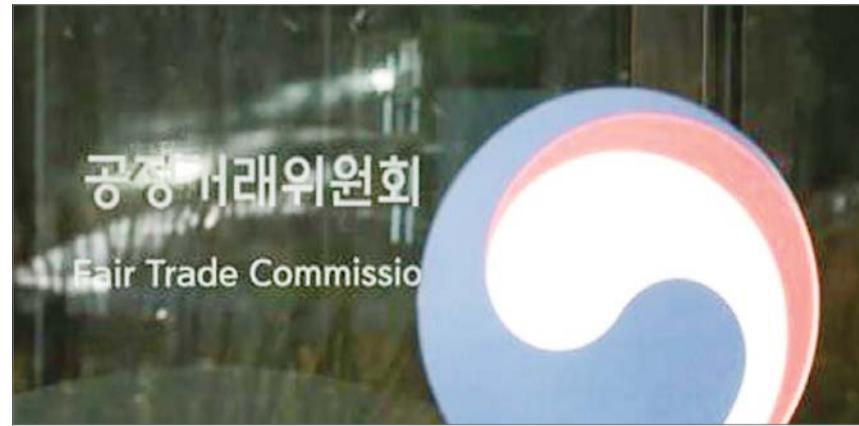
## 전해철 위원 국감자료

‘기업집단국’ 출범… 성과 미미 정상가 산정·부당성 입증 못해 “법 개정 등 근본적 해결책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인 ‘부당지원’ 행위 제재 후 법원에서 완전 승소한 비율이 20%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정위 조사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1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기업집단국 현재 진행 부당지원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위가 제재한 부당 지원 사건에 대해 제기된 행정소송에 서의 확정판결은 10건이다. 이 중 공정위가 완전 승소한 것은 2건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로부터 부당지원 행위를 이유로 제재받은 신세계·삼양식품(2건)·SK텔레콤·한국남동발전·한국수력원자력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



/연합뉴스

정소송 6건 모두 기업 측이 승소했다. 기업이 계열사 등에 부당지원을 했는지 여부는 해당 거래에서 계열사에 적용한 가격이 일반적인 시장 정상가격과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 여부에 달렸다. 계열사에 제품을 팔았다면 시장 가격보다 얼마나 싼 값에 공급했는지, 반대로 계열사에서 제품을 샀다면 얼마나 비싼 값을 치렀는지가 핵심이다. 판별을 위해서는 정상가격은 어느 수준인지 정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사건에서 공정

위의 정상가격 산정과 부당지원 입증 방식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철도공사와 LS가 제기한 소송도 깔끔한 승소는 아니었다. 정상가격 산정이 일부 잘못 됐다거나, 과정금 액수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공정위가 완전 승소한 사건은 CJ CGV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당 지원 행위 제재 사건밖에 없다.

앞서 CJ CGV는 2016년 이재현 CJ 그룹 회장의 동생이 소유한 회사에 광

고 영업을 몰아준 혐의로 과정금 71억 7000만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LH의 경우 2015년 자회사인 주택 관리공단에 일부 단순 임대업무를 위탁하면서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과정금 146억 4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이들 10개 사건은 모두 ‘공정거래법’ 23조 1항에 있는 부당지원행위 금지 조항에 따른 조사였다.

공정위는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지원을 규제하기 위해 지난 2014년 공정거래법에 사익편취 금지 규정 23조 2항을 신설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23조 2항을 적용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제재한 첫 사례인 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 사건도 2017년 서울고법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바 있다.

공정위도 적극적인 조사를 주저하는 모양새다.

공정위는 2017년 9월 재벌의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 등에 대한 규제를 강

화하고자 이를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 조직인 기업집단국을 신설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다.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기업집단국의 기업별·혐의별 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업집단국은 출범 이후 11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지만, 이 중 5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일례로 한화그룹 한화에너지에 무연탄 등 연료를 헐값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벌였으나, 지난 8월 중순 무혐의 처리했다.

이 외에 공정위는 현대엘리베이터·알바이오·신세계·롯데쇼핑 등의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나 무혐의 종결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최근 5년간 공정위가 대부분 패소한 것은 모두 정상가격 산정 및 부당성 입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법원과 다른 해석을 보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성 입증 문제에 대해 법 개정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 ‘탈세 의혹’ 삼성테크윈… 조세심판원 “稅 취소를”

조세심판원 “탈세로 보기 어려워”  
검찰 수사에도 영향 미칠 듯

국세청이 조직적으로 탈세를 저지르면서 은폐도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까지 한 삼성테크윈 탈세 사건이 조세심판원에서 ‘무혐의’로 뒤집어졌다.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이며 수사해 온 검찰은 추후 법률 검토를 더 해보고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조세심판원에서 탈세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이 난 만큼 무혐의 처분할 공산이 크다.

1일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조세심판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삼성테크윈)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세금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4월 국세청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삼성테크윈 시절인 2009년 카메라사업부를 분할하면서 카메라 등 재고자산을 대량 폐기한 것처럼 장부에 허위 기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탈세한 혐의를 갖고 회사 층에 세금을 추징하면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탈루 세액은 120억원이며 국

세청은 가산금 등을 합해 200억원대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범죄조사로 전환하고 회사를 고발한 것은 회사가 조직적으로 탈세 사실을 숨기려 회사

서버를 조작하는 등 은폐 행각을 벌였다고 봤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삼성테크윈이 분할 법인의 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한 ‘분식회계’를 하려고 재고자산을 장부에서 제외했고, 세무조사를 앞두고 전담 TF를 구성하고서 가짜 전산서버까지 구축하는 등 조직적인 은폐에 들어갔

다고 판단했다.

검찰도 국세청 고발에 따라 고의적 탈세에 초점을 맞춰 지난 3월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정작 조세심판원은 회사의 행위를 탈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고물량은 어차피 폐기 처리하기로 했던 것으로 필수적이고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회사 분할 과정에서 신설 법인에 넘기지 않은 자산이 법인 자산총액의 0.82%에 불과해 미미하다는 것.

국세청은 규정상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 이에 국세청은 이미 지난달 세금을 환급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세 사건의 경우 국세청의 고발을 접수해야 수사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수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과세당국이 탈세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기에 검찰도 탈세 사건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국세청은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검찰 고발까지 한 사안에 대해 조세심판원에서 취소 결정이 내려지는 일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석대성 기자

## 10억 이상 ‘초고액체납자’ 2배 껑충

## 조정식 의원 국감자료

39명서 96명으로 늘어  
총 누적 관세 체납액 1조

올해 누적 관세 체납액이 1조 270억 원에 달하고, 고액체납자 10명 중 6명은 납부 불가능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2013~2019년 7월 관세 체납 발생과 이월액 및 관세 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체납액은 1조 267억원으로 2013년 5789억원에 비해 77%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체납액은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도 넘어섰다.

반면 현금수납·부과취소 등 체납 관세 정리 실적에 따르면 같은 기간 1913억원에서 1078억원으로 43.6% 감소했다. 올해 정리 실적은 지난 7월까지 1028억원이다.

관세 체납자는 같은 기간 2987명에서 지난해 3727명으로 늘었다. 특히 10억



원 이상 초고액체납자는 같은 기간 39명에서 9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조 의원실은 또 ‘국세기본법’에 따라 규정한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체납자는 올해 7월 기준 328명이며 이 중 59.8%인 196명은 무재산·폐업·파산 등 이유로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석대성 기자

## 정부 지원받은 청년몰, 10곳 중 3곳 ‘폐업’

## 이용주 의원 국감자료

중기부, 투입 사업비 337억 달해  
낙후상권 많고 청년 전문성 부족  
“창업 시작 전 역량 강화 우선해야”

중소기업벤처부가 지원하는 청년몰 489곳 중 140개 점포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입지 여건과 전문성 부족 때문이다.

1일 무소속 이용주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몰 조성사업을 시행한 2016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지원한 청년몰 중 29%가 휴·폐업 상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영동시장의 14개 점포가 휴·폐업 상태로 가장 심각했다. 이어 서울시 이화여자대학교 앞 스타트업 상점가와 충북 청주시 중앙시장, 전남 여수시 중앙시

장이 각 12개, 인천시 강화군 중앙시장과 전북 군산시 공설시장의 각 10개 점포가 문을 닫았다.

폐업률은 전북 전주시 서부시장 상점가의 지원 점포 12개 중 9개가 문을 닫아 가장 높았다.

지원 점포 수 대비 휴·폐업률이 75%에 달한다. 이어 충남 천안시 명동대통로 상점가가 13개 중 9개로 휴·폐업률 69%, 제천시 중앙시장 19개 중 12개 63%, 서울시 이대 앞 스타트업 상점가 22개 중 12개 55%가 문을 닫았다. 수원 영동시장과 군산 공설시장은 각 50%의 휴·폐업률을 기록했다.

정부의 청년몰 조성은 전통시장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청년 점포 20개 이상을 조성하고 시장 당 최대 15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4년간 총 사업비는 336억 8970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전통시장 내 유휴 공간 대부

분이 낙후된 상권이고, 고객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다. 청년 상인 대부분도 창업 경험이나 전문성, 역량이 부족해 단순한 사업 구상을 미약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정부가 수백억원의 예산을 쏟고 있지만, 청년 상인의 경험 부족과 침체한 전통시장의 열악한 입지 조건 등으로 문 닫는 청년몰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청년 상인 사이에서는 정부 지원보다 오히려 요식업 사업가 백종원이 더 필요한 말이 성행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청년 상인의 안정적 정착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창업 시작 전 구상·기술·영업 등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석대성 기자